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6
----------	------

발의연월일 : 2024. 6. 28.

발 의 자 : 진선미 · 윤종균 · 임오경
이학영 · 한병도 · 남인순
한정애 · 김준혁 · 임호선
이광희 · 김문수 · 정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검시 과정에 참여하여 과학적 · 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

음.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라. 법의관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법의관은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사체”(變死體)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를 말한다. 다만, 명백한 병사를 제외한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사인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시체를 포함한다. 변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안”(檢案)이란 변사체의 사망원인(이하 “사인”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사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검”(剖檢)이란 변사체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해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시”(檢屍)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시업무”란 검시 및 그와 관련하여 사인 등을 서류로 작성하거

나 검시결과를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등 검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6. “법의학관”(法醫官)이란 이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검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검시보조자”(檢屍補助者)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의학관의 검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시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3. 검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 검시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5.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7. 검사업무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검사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법의학관의 자격) 법의학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전문의 자격 취득

2.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의학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 수료

제7조(법의학관의 직무) 법의학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사체의 해부

2.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변사체의 검안 및 부검

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체의 해부

4.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군의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할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

5. 그 밖에 사인을 밝히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제8조(직무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법의관으로 본다.

③ 법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보조자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대행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법의관의 의무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사체가 이동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한 법의관은 사인, 부검의 필요성 여부
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한 법의관은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
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법의관이 즉시 변사체를 검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2호의 직무 중
변사체 검안에 관한 직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대행하는 직무의 범위에 「의료법」 제17
조제1항에 따른 검안서 발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시업무, 서류의 작성·제출, 통지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기관의 협조 등) ①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였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의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고위험, 수사상 필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법의관과 협의하여 변사체를 적
절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변사체가 발견된
당시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단체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① 법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시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법의관의 독립성 보장)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의관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관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의관 양성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의관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7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법의관의 직무 수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직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의사는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